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9. 11. 20
- 나. 제안자 : 최만용·강문기 의원 외 8인
- 다. 회부일자 : 2009. 11. 20
- 라. 상정일자 : 2009. 12. 16(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최만용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부평미군부대는 2002년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에서 평택미군기지 완공시기가 2015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평미군부대도 이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오랜 반환운동 끝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이 불이행하는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도심지 한가운데를 차지한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어야 함.
- 따라서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하여 이전부지에 공원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설치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

나. 주요내용

-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의 평택이전계획에 의거 이전기로 한 부평미군부대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전치 않은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여 인천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
-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계획된 공원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그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인천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빠른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은 군수보급품 저장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미토지연합관리계획에 의하여 2008년경에 반환기로 추진되었으나 평택미군기지의 완공시기의 지연으로 부평미군부대의 이전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한미간에 협의된 주한미군의 재배치사업과 병행하여 2007년4월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우리시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평미군부대 이전과 병행하여 동 지역을 부평을 포함한 인천의 새로운 구심축으로 활용하고자 토지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였으며
- 시에서는 동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부평미군부대를 포함한 약 60만㎡에 대하여 발전종합계획안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9. 2. 23일 신촌공원,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광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바 있음.
-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과 이전부지의 계획적인 정비는 우리시의 당면 현안이므로 미8군과 국방부 및 외교통상부에 대하여 275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달하는 동 결의안의 채택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박승희 위원
 - 부평미군부대의 이전 시기는

< 답 변 >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이전 시기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현재까지 없으나, 국방부에서는 평택 미군부대 조성 완료시점인 2015년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

5. 토론요지

- 찬 성 : 문희출, 강문기, 노경수, 박승희, 이재호, 성용기, 이은석 위원
-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찬성 : 7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 타 사 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문 1부. 끝.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문

부평미군부대는 2002년에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전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등의 평택이전계획에 의한 미군기지 완공시기인 2012년을 이전시기로 기대하였으나 최근 평택미군기지의 완공이 2015년으로 전망함에 따라 부평미군부대 이전도 사업기간이 무기한 연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부지에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조속히 원하는 275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이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인천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등의 평택이전계획에 의거 이전기로 한 부평미군부대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전치 않은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여 인천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계획된 공원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그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인천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빠른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9. 1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